

“더민주-국민의당 벌써 87곳 충돌...“수도권 연대 없인 공멸”

호남·수도권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분석해보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수도권 대결 전선이 확대되면서 야권 내부에서는 ‘분열로 인한 공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수도권에서는 승리를 위한 연대를 해야 한다는 지역 민심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1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 후보자 등록 명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함께 등록된 지역구는 142곳 중 87곳(61.3%)이다. 수도권은 서울 48곳 중 26곳(54.2%), 경기 52곳 중 29곳(55.8%), 인천 12곳 중 9곳(75%)에서 두 당의 후보들이 충돌하고 있다.

수도권은 정치적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후보자 공모가 끝나는 이달 말에는 양당의 예비 후보가 겹치는 지역구는 거의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5%포인트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 곳이 4분의 1이 넘는 31곳에 달해 야권 참패를 막기 위한 선거 연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 당이 선거 연대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생존을 위한 야당 후보들 간의 후보단일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당이 현재 선거 연대에 대해 한 발 빼고 있지만 수도권 선거 구도상 분열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 막판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어느 한 진영에서 양보하는 대응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달까지 90% 이상서 경쟁

수도권 5%P 차 당락 좌우

선거 막바지 후보 단일화 절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에서는 광주 8곳 중 6곳(75%), 전남 11곳 중 7곳(63.6%), 전북 11곳 중 10곳(90.9%)에서 두 당의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이달 중순이면 호남 모든 지역구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에 앞서 내부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남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인물로 치열한 경쟁전을 펼쳐야 한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여부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의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은 8명, 국민의당 소속은 9명. 새누리당과 무소속이 각 1명이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과 야권 경쟁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일정부분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경쟁과 수도권에서의 연대는 호남 민심의 요구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어느 당이 수도권에서의 연대에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느냐도 호남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창선 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부인 김미경 씨가 1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산성당을 찾아 미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선거구 20% 범위내서 전략공천 국민의당, 친인척 부정부패 연루도 배제

양당 공천률 비교해보니

국민의당이 지난 12월 총선 공천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총선 입지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양당은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더민주의 선거구수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했지만 국민의당은 수적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또 더민주의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단수후보 추천이란 제도를 따로 뒀으나 국민의당은 이 부분도 전략공천의 개념에 포함했다. 경선과 관련, 더민주의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 가능)과 시민공천배심위원선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당원투표 ▲속의선거인단투표 ▲속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사용토록 했다.

양당은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더민주의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후투표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선 2개·4개 방식서 선택

신인·여성 등 가산점 부여

했다. 국민의당도 1차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공천 부적격자와 관련, 더민주의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장계 경력 보유자(제명, 당원자격정지) ▲경선 불복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위반·성범죄·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위반·성범죄·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으로 했다.

국민의당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

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다만, 두 당 모두 후보자검증위나 자격심사위원의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더민주의 현역 의원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통해 20%는 공천 배제하도록 해 현역 물갈이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더민주의 신인의 경우는 득표수의 10%, 여성·장애인·청년(42세 이하)은 득표수의 25%를 가산하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게 10~20% 가점을, 정계자의 경우 최대 20% 가점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14일 야권의 한 관계자는 “두 야당 모두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지만 예외 규정도 있어 당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공천작업 착수

이한구 “우세지역 물갈이”

호남 100% 여론조사 경선

4·13 총선 후보자를 선별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총선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대구·경북(TTK) 등 우세지역 일수록 우선 추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관위 산하 3개 소위는 이미 개별적으로 모임을 갖고 심사 일정과 평가 항목 등을 논의하는 등 공천의 세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소위는 1차로 예비후보들을 걸러낼 ‘심사용 사전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기준과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14일 공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로 ‘100%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30%, 일반 국민 70% 여론조사’ 경선 가운데 어떤 것을 실시할지는 ‘책임당원 100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협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책임당원 수가 적은 호남지역, 당선 가능한 외부인사가 공천을 신청한 경우에도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93명 등록

평균 경쟁률 4.89대1...국민의당 30명 가장 많아

4·13 총선이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수는 모두 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주·전남 현행 11개 지역구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4.89대1로 광주는 3.5대1(8개 선거구 28명 등록), 전남은 5.9대1(11개 선거구 65명 등록)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이 30명(32.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25명(26.88%), 새누리당 13명(13.98%), 정의당 5명(5.38%) 등의 순이었다.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3명(3.23%)이었으며 무소속은 모두 19명(20.43%)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8명으로 여성(5명)의

17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6명(49.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5명(26.88%) ▲60대 13명(13.98%) ▲70대 5명(5.38%) 등의 순이었다. 20대와 30대 후보자도 각각 1명(1.08%)·3명(3.23%)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19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구례로, 무려 12대1에 달했다. 이어 순천·곡성 11대1, 목포 8대1, 나주·화순 8대1 등이다.

반면 담양·함평·영광·장성엔 아직까지도 단 한 명의 예비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선거구인 이 지역구는 현재 선거구 획정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후보자들의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alee@

공정인사 지침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Q. 누구는 '쉬운 해고'라고 하던데요...

· **아닙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해고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 객관적 평가를 거치고 배치전환, 교육훈련 등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Q. 나도 대상이 될까 걱정됩니다.

· **걱정마세요.** 대다수 근로자는 업무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전에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정리하여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침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입니다

Q. 맘대로 임금을 깎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하죠?

· **좋아집니다.** 중장년은 더 오래 일하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어 납니다.

Q. 전에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정리하여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